

한의계에 대한 편애

조명덕 / 의협신보 기자

'93년 보건의료계의 가장 큰 이슈라면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한의사와 약사간의 분쟁일 것이다.

이는 비단 보건의료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도 커다란 화제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의대생들의 집단휴업·유급사태와 약사들의 폐문사태로 이어지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집단이익을 위한 극단적인 싸움이 온 국민의 시선을 모았다.

이같은 과정을 수수방관만 하던 정부는 그 후 일련의 정책입안에 있어 다분히 한의사와 한의학에 편애를 베푸는 듯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우선 약사법개정안의 경우, 한약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나 의료계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의원일원화에 정면으로 역행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의료이원화를 고착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새삼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원화돼 있으며 심지어 온갖 민간요법과 TV·신문 등 매스컴이 무책임하게 방송 또는 계

재하는 건강상식류의 프로그램·기사로 인해 「다원화」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의료이용 혼란은 물론 의료비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한약의 가격·약효·안전성·유통 등 제도적 관리가 전무한 실정임을 감안하면 이제부터라도 검증·지도할 의무가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약사법개정안에는 한약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어떠한 내용도 담겨 있지 않다.

게다가 의약분업마저도 양한방이 동시에 실시돼야 한다는 대전제를 무시하고 양방의약분업은 2년 후에 실시하면서 한방의약분업은 무기한 시행을 연기해 형평을 잃은 처사를 보이고 있다. 한방의약분업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양방에도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아무튼 약사법시행규칙 하나로 인해 발단된 한약조제권 분쟁 때문에 의약제도의 큰 뿌리가 흔들리는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의계의 요구만 받아들이는 편파적인 시책의 또 한 단면은 한의사를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임용하려는 병역법개정안이다.

군의관들이 담당하는 군진의학은 부상 환자에 대한 후송치료와 장병들의 예방 의학적 건강관리가 가장 큰 목적인데 병명의 분류는 물론 진료방법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한의학을 군진의료에 접목하려는 의도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며 더구나 외과학이 없는 한의학을 편입시키려는 것은 군진의료의 발전은 커녕 혼란과 후퇴를 자초하는 조치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세균을 인정하지 않는 한의학을, 예방의학을 주로 다루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에 참여시켜 보건위생을 책임지라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처사임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현재의 의사 수만으로도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 인력수급에 아무런 차질이 없음을 물론 오히려 남아도는 상황에서 군의관을 한의사로 임용한다는 것은, 그것이 현재의 군의관인력을 일부 대체하는 것이라면 장병의 건강관리 및 유사시 군진의학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고, 군의관인력의 추가라면 국력의 낭비를 의미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한의계에 대한 편애는 또 다른 곳에서 도 나타난다.

한의학분야의 육성발전을 위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구, 한의학의 현대화·체계화를 통해 국민보건에 이바지한다는 명목으로 입법예고된 한국한의학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원화 되어 있어...
국민 건강의 수호라는
신성한 목적이라
어느 한 분야에 대한
편애없이
보건의료정책은 시행되어야...

연구소법안이 그것이다.

이 연구소가 시행하겠다는 한의학관련 문헌·이론·임상·실험 등과 한약조제·침구학의 발전에 관한 연구 및 국제 교류사업 등은 지금도 전국의 11개 한의과대학과 관련학회·단체 등에서 활발히 시행하고 있으며 정책개발과 관련된 연구사업은 기존의 한국의료관리연구원이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한의학연구소를 설치하겠다는 의도가 한약분쟁 후 한의계에 대한 무마책이라면 국가예산의 낭비일 뿐 아니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문민정부의 의지에도 어긋나는 것임에 분명하다.

아무튼 국민건강수호라는 신성한 목적 아래 시행되어야 할 보건의료정책이 보건의료의 한 분야에 대한 편애에 치중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보건의료계는 물론 전국민의 우려와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이다.

†